

매칭사업의 역습... 지방비 부담에 국비 포기·축소 '딜레마'

윤석열 정부 재정 파탄과 경기 침체 여파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점·현안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특히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국비 분담액 확대로 매칭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경험한 역대급 재정위기가 내년에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2500억 원가량 늘면서 매칭 부담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칭해야 할 시비는 7600억 원으로,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부족 재원의 두 배에 이른다.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각종 돌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저상버스, 복귀기금 등 사회복지사업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글로컬대학, AI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와 전략사업에 적게는 수 십억 원, 많게는 수 백억 원의

광주시, 지방세 ↓ 복지비 ↑ 매칭 시비만 7600억... "세출 구조조정" 담양군 "무리한 매칭으로 재원 바닥"... 타 지자체도 사정 엇비슷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자체별 차등·가중, 전액 국비사업 늘려야"

시비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1단계 마무리 공사과 2단계 토목공사 동시 추진을 위해 국비 1660억 원에 대한 매칭 시비 500여 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재정적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규모 사업은 시급성, 필요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시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 용역, 행사·축제성 경비,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등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매칭사업을 포함한 중점·현안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도 최근 추경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국비 매칭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은 뒤 "전액 국비 사업 확대와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양군은 아예 매칭사업 전면 중단에 나섰다.

매칭 지방비 부담과 수 년째 이어져온 확장재정으로 가용재원이 바닥을 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응모마저 포기했다. 선정될 경우 1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용근비의 70%에 달하는 군비 분담금(291억 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군 관계자는 "전임 군수들의 무리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압박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민생과 생활민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 침체로 비상이 걸린 전남 동부권도 심각하다.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교부세와 지방세는 크게 줄면서 국비 매칭사업에 손사래를 쳐야 할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대책비도 순천은 절반만 배정 받았고, 여수는 배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목포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대로 매칭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이 전환경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지자체로 주소 옮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광, 화순, 장흥 등지에서도 애써 확보한 국비나 도비를 매칭사업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연간 수

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가 대표적이다. 2012년 최초 논의 당시에는 국비 80%, 시비 20%로 협의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요구로 50대 50으로 변경됐지만, 정부 주도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로 방음터널(12곳) 설치비 3400억 원이 추가되면서 매칭 조정, 즉 정부 분담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 인상하는 법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57%사 국세와 연동되고 지방채 발행도 중앙에서 제한하는 등 중앙중속 구조여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 없이 명쾌한 타개책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분야 등 일부 국고보조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올리고 소멸 위거나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등이나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너릿재서 합동 '산불 진화 훈련'

서부지방산림청 등 14개 유관기관 현장 대응 훈련 실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서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11일 동구 선교동 너릿재 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남서풍을 타고 무등산국립공원 방

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림청 산별방지구(헬기 지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립공원관리소,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31사단 503여단, 광주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산불 상황판단회

의 ▲주민 대피 ▲문화재·민가 등 주요 시설 보호 ▲진화지원 동원 ▲현장 투입 등 산불 대응 전 과정을 실제 상황에 준해 진행했다.

특히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상황을 주시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산불 확산 예측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진화 전략을 적용한 훈련을 펼쳤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 현장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종합상황실 6개를 가동해 주차 질서, 비상 수송, 소음 통제 상황을 총괄한다.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543명(18개 기관)이 특별교통대책에 투입된다.

먼저, 시내버스 가·종점 14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도 7곳에는 질서요원 70여 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각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되도록 관리하고, 수험생 경유지·시험

광주시, 수능 특별교통대책 시행... 비상수송 운영

수능일 종합상황실 운영... 18개 기관 543명 투입 교통관리

장 방향 지하철도 출구 등을 안내한다.

각 시험장 인근 도로(반경 2km 이내)에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질서요원을 배치한다. 특히 시험장 반경 200m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또, 시험장 경우 시내버스 38개 노선을 등고 시간대(오전 6시~7시30분)에 집중배차하고 버스 내부에는 시험장별 정차 정류소 안내문을 부착한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능 당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며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오후 1시10분~1시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장애인 수험생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시험장 등·하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 입실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은 112로 신고하면 순찰차 긴급 수송이 가능하다.

/전민규 기자

전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전남도 '환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피해자 대상 첫 사례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권력이 부당하

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